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No. 60

IIRI Online Series

인간안보 vs. 정권안보: 코로나19의 교훈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0. 2. 20



일민국제관계연구원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인간안보 vs. 정권안보: 코로나19의 교훈



이 신 화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0년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는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공식 규정하였다. 미국이 특정 국가나 단체가 아닌 질병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룬 첫 케이스였는데, 에이즈가 한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고 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에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도 범세계적으로 급속한 전파력을 지닌 전염병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촉구하는 ‘건강안보(health security)’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건강안보란 경제안보, 식량안보, 환경안보 등과 더불어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주창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구성요인 중 하나이다. 인간안보는 단순히 군사적, 정치적 안보만으로는 국민 개개인이나 특정 그룹의 삶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주권보다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주권(individual sovereignty)’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일종의 당위론적 규범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인간안보 구상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제로는 규범과 정책 사이의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두드러져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경우는 흔치 않다. 한 국가의 안보정책

은 어떤 이슈를 위협으로 상정할 것인가에서 시작되는데, ‘국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들이 많은 경우 위정자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유지를 위한 ‘정권안보’에 집착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러야 하는 몫이 되곤 한다.

전 세계를 덮친 중국 우한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공포도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안보 혹은 정권안보의 관점에서 재난문제에 대처하려다 골든타임을 놓친 전형적인 사례이다. 2019년 초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날, 당·정·군 핵심 간부들을 소집하여 정치, 이데올로기, 경제, 과학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블랙스완(개연성이 낮지만 실제로 나타나면 큰 충격을 야기할 위험)’과 ‘회색 코뿔소(충분히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지만, 이를 외면하여 통제불능 상태로 빠뜨리는 위험)’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위기의식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1년 만에 실제로 나타난 블랙스완(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은 회색 코뿔소의 재앙을 자초한 격이다. 언론 통제와 극장 대응으로 질병의 세계적 확산을 초래했던 2003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재연하듯, 초기 정보차단과 방역 실패가 재앙을 키웠다는 비판이 많다.

2019년 12월 말 원인불명의 폐렴 확산에 대한 위험성을 최초로 외부에 알린 우한 의사 리원량(李文亮)을 비롯한 8인은 유언비어 유포로 처벌받았다. 후베이성 우한 공안당국은 1월 성급(省級) 양회(兩會)를 앞두고 사회동요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월 7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정치국 상무위 회의에도 이 안건이 올라왔지만, 최대 명절인 춘절대목과 최대 연례정치행사인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질병통제 보다는 사회 안정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1월 20일이 되어서야 시진핑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23일 우한을 봉쇄하고, 25일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책임자 문책에 나섰다. 2월 10일 시 주석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들끓는 중국 민심을 의식하여 처음으로 방역현장을 찾았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19는 중국을 넘어 세계 보건과 경제에 엄청난 위협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질병 관련 컨트롤타워의 수장인 거브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은 중국을 두둔하는 행보를 보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이는 중국의 막강한 자금력이 국제기구에서 인권 관련 역할을 축소하고 중국식 국가주도로 규칙을 정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반증이다.

코로나19는 2018년 3선 개헌을 통해 종신 집권 가능성을 열어 모택동에 버금가는 강력한 권력을 구사해 온 시진핑의 리더십에 경종을 울렸다. 17년 전 사스 위기 발발 당시 갓 권력을 잡고 선임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쪽짜리 지도자’란 소리를 듣던 후진타오에 비해 시진핑의 권력은 최고 정점에 있지만, 대내외적 조건은 더 험난해 보인다. 경제침체와 홍콩 민주화 운동에 더해 바이러스 악재까지 겹쳤으니 말이다.

사스 사태도 발발 5개월이 지나서야 군의관 장옌융(蔣彦永)에 의해 서방언론에 폭로되었다. 당시 후진타오는 뒤늦게나마 장쩌민 계파의 폐쇄적 통치와 차별되는 “하나는 하나고, 둘은 둘이다(一是二 二是二)”라는 투명한 대처방법으로 사스와의 전면전을 벌였다. 결국, 사스 위기는 후진타오에게 정치적 기회가 되어 이후 안정적인 통치를 구가하게 되었다.

시진핑의 뒤늦은 바이러스와의 전면전도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까? 일단 그는 이번 전염병 퇴치를 ‘마귀와의 전쟁’으로 명명함으로써 어쩔 수 없는 블랙스완 사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그리고 누가 봐도 회색 코뿔소가 코앞에 있는데 “전염병보다 유언비어가 더 무섭다”라며 언론과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형국이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내년까지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강(小康)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집권 명분으로 내세운 시진핑으로서는 대중적 소요나 사회 혼란이 발생할 소지를 전면 차단하는 것이 우선순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글로벌 2대 경제 강국인 중국은 안팎으로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하고 있고, 어디서든 실시간 정보가 공유되는 스마트폰 시대를 맞은 중국인들도 잘 먹고 잘사는 것 못지않게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갈구하게 되었다. 리원량의 사망소식에 대한 인터넷 조회 건수가 10억 건을 넘어서는 등 대중적 좌절과 분노가 팽배한 가운데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중국 내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시진핑 정권은 미생물만이 그들이 싸우는 마귀의 전부라고 믿으며 더욱 강력한 통제책으로 바이러스, 나아가 인민에 대처하여 자신들의 지도력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우한실태를 고발한 영상을 올린 시민기자 천추스(陳秋實)와 팡빈(方斌), 그리고 시진핑 독재 체제를 비판한 칭화대 법학교수 쉬장룬(許章潤) 모두 실종상태이다. 정치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거짓말이나 어떤 조치라도 하는 게 여전히 중국 국가통치체계의 민낯이다.

설사 시진핑이 강력한 상황장악력으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한다 해도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불신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WHO를 통해 지역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한폐렴이라는 명칭 대신 코로나19라고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 대외적 불신을 약화시킬 것 같지도 않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가 우한 시장이 아니라 우한 바이러스 실험실이라는 설에 대해서도 집단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 혹은 인포데믹스(informdemics, 정보전염병)라고 비판하는 시각보다는 “중국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인식이 팽배하다. 결국,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기치로 ‘팍스 차이나(Pax China)’를 갈구하는 중국인들의 커다란 호응 속에 집권했던 시진핑이 이번 사태를 딛고 국제사회 속 중국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바이러스와의 전쟁 못지않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 국민들이 위정자에 대해 가진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특히 타 지역으로의 전염병 확산을 막겠다고 하루아침에 봉쇄된 도시에 갇힌 우한 사람들은 그제서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걸 알고 병원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2차, 3차 감염으로 참사는 이어졌고, 병상을 못 구하고 치료 시기를 놓쳐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이다. 현재 중국 정부의 봉쇄정책으로 고립되어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없는 후베이성 주민들은 6천여 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공포와 무력감에 쌓인 채 시진핑 체제 관료사회의 보신주의(補身主義)와 독재체제의 모순과 거짓으로 인한 대가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반인권적 도시봉쇄의 희생양이 된 이들에게 전염병과의 인민전쟁을 선포하며 유례없는 강력한 조치들을 내세운 시진핑 지도자와 국가란 무엇일까?

이 사태는 1986년 4월 26일 원자로 관리 미흡과 안전절차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였던 우크라이나(구소련) 체르노빌 원전폭발을 떠올리게 한다. 주민들은 발전소에 불이 났다는 것만 알 뿐, 사고 36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떠한 설명도 대피명령도 받지 못한 채 입소문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발전소의 책임자는 일어날 수 없는 폭발이라며 폭발 사실 자체를 부정했고, 최초 보고를 받은 관료들도 사고 축소와 은폐에 급급하여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로 인해 유출된 방사능으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가 된 이 폭발사고는 수많은 인명피해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폐쇄정책과 비밀주의로 일관하던 소련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여러 다른 원인들과 합쳐져 체제붕괴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시진핑이 언론통제와 도시봉쇄를 통해 현 상황을 타파하려는 철권통치를 견지한다면 이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비난받을 일일 뿐 아니라 사회 안정과 정권유지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은폐와 통제는 단기적으로 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큰 사회적 혼란과 국내외적 불신의 확대로 이어져 정권위기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질병(에이즈)을 한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주목한 이유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중국판 체르노빌’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의 ‘흑역사’를 은폐·조작하려는 시도는 결국 버림받은 국민들의 인간안보와 이들을 배척한 위정자들이 지향하는 정권안보 모두를 해칠 수밖에 없다.

/끝/

저자 소개

이신화 교수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민국 공공외교위원회 민간위원 및 국방부 소요검증위원회 자문위원이다. 전 유엔 코피 아난 사무총장 르완다 학살독립조사위 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의장자문관, 서울국제포럼 연구위원장, 미국 컬럼비아대 초빙교수, MIT 방문학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The Pursuit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idst Growing Political and Economic Divides in Northeast Asia (2015), “유엔 다자주의 틀에서의 강대국 정치: 안보리 결의안과 미중안보경쟁” (2018), Human Security and Cross-Border Cooperation in East Asia (2019), “평화외교와 안보공공 외교로서의 PKO에 관한 고찰” (2019), “Is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t Risk? Causes and Remedies” (2019) 등이 있다. (Email: swlee@korea.ac.kr)